



윤석열 정부의
앞날

8~10면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16면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6~7면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5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3~4면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일시
5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침하 후 행진)

주최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제안 bit.ly/0521-StopTheWar
문의 010-7550-2131 (English 010-2196-1917)

한동훈은 또 한 명의 조국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내로남불이다

특권층의 위선이다

관련 기사 8, 9, 10, 11면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이 체제는 외부의 시선이 쉽사리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야만적인 얼굴을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외국인보호소가 그런 곳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박이랑** 기자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보호소의 독방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시리아 난민의 증언을 들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메르 무함마드 파두입니다. 시리아 출신 난민이에요. 2012년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고,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2012년에 내전이 격화되면서 살기에 아주 위험한 곳이 돼 버렸어요. 특히 저는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정권에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 명단에 올랐어요. 시위에 나갔다가 총을 맞았는데, 아직까지도 제 머리 안에 실탄 파편이 박혀 있어요. 동생과 조카들은 정권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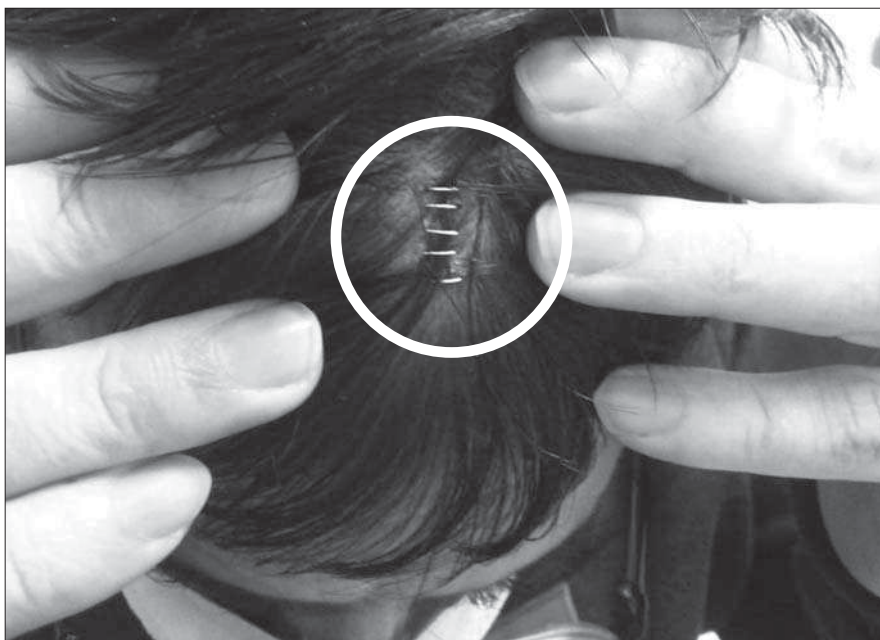
그래서 당시 친형이 살고 있던 한국으로 왔어요. 이전에도 몇 번 일 때문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집트에 난민으로 있어요. 동생 중 3명은 스웨덴 국적을 취득했고, 다른 한 명은 노르웨이 국적을 받았어요.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이 거부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난민 신청을 했어요. 일단 난민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중고차 거래 일을 했어요. 한국 정부는 어떠한 정신적,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알아서 해야 했어요.

그러다 2014년에 난민 신청이 최종 거절됐어요. 시리아가 [저에게] 안전하다는 것이 사유였어요. 시리아에 문제가 없다니요?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안 보나요? 그래서 다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어느 날, 당시 저를 맡던 변호사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출입국·외국인청 건물 내부의 어느 사무실로 갔



상처 외국인보호소에서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해서 파두 씨의 머리에 상처가 남았다

는데, 출입국·외국인청 측에서 몇 명이 저를 만나러 나와 있었어요. 저에게 난민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시리아로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취소하면 1년짜리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때부터 1년마다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를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살아왔어요.

시리아로 추방 위협도 당했다고요?

2019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대구 칠곡에 월셋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 때문에 임대를 하던 곳의 건물주와 다툼이 있었어요. 건물주는 제가 방화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한국인 건물주의 말만 듣고 저를 연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억울해서 항소했는데, 결과를 기다리다가 8개월이 흘렀어요. 대구 구치소에 있었는데 여기서 지낸 8개월 중 무려 5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해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구치소 측은 저에게 수갑과 사슬을 채워 추운 독방에 가렸어요. 수갑이 쇠사슬로 고정돼 있어서 손을 옆이나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잘 때조차도 묶여서 고정된 자세로 자야 했어요. 밥이 나올 때 딱 30분만 풀어 줍니다. 결국 손의 신경을 다쳐

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그렇게 8개월을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출입국·외국인청 측에서 강제 퇴거명령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시리아로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시리아로 어떻게 돌아가라는 건가요? 저는 수배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에 시리아 인접국만 가도 체포될 위험이 있어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긴밀한 나라도 방문하기 위험해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2020년 7월부터 [강제퇴거 절차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고, 그곳에서 2022년 4월까지 무려 22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화성보호소 측은 저를 22개월 중 6개월 동안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독방에 가렸어요. 새우깡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인 M 씨처럼 독방에서 뒤로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틀씩, 5일씩 독방에 가렸는데, 일수를 세어 보니 총 6개월 정도나 됐어요.

고문과 폭행도 당했어요. 독방에서 최소 열 차례 이상 지팡이처럼 생긴 전기충격기로 고문도 당했는데, 마지막 전기 고문은 2021년 7월에 있었어요. 모로코인 M 씨를 고문한 영상이 폭로되자 보호소 측은 저에 대한 전기 고문을 멈추고 결박도 풀어 줬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2020년 말부터는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2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보호소 측 의사는 아무 소용도 없는 약만 계속 건네줬어요. 귀에서는 고름이 났어요. 이는 4개가 깨지거나 빠졌고 결박 때문에 손도 망가졌어요.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달라는 제 요구는 계속 묵살당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알약과 타이레놀만 계속 줬어요. 사람이 계속 억압을 받다 보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됐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변호사 단체에서 저를 도와 보호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저를 구금한 것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풀려났지만 제 건강은 망가졌고, 돈도 한 푼도 없어요.

구치소와 보호소에 갇혀 있느라, 집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제 소유의 차량도 폐차됐어요.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에게 고지하고 폐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호소 측에서는 이런 고지서를 하나도 저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폐차 비용 100만 원이 제 앞으로 청구됐어요.

4월 4일에 화성보호소에서 나왔는데, 정말 돈 한 푼 없고 잘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흘 동안 수원역 앞 길거리에서 굶으면서 잤어요. 지나가던 한 여성 분이 모텔비도 내주고, 먹을 것도 구해 주셔서 며칠을 지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친구들이 지원해 줘서 대구에 다시 내려와 방을 구해 지내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화성보호소의 모로코인, 여수보호소의 이집트인, 그리고 저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바로 난민이라는 점이에요. 저희 난민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를 이렇게 원치 않으니,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저는 답을 원합니다.

미국의 전쟁 목표

“러시아 약화”로 공세적 변경

김인식

미국이 “러시아 약화”를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미국의 목표가 전쟁 종식이나 우크라이나의 실지(失地) 탈환이 아니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어마어마한 중화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약 41조 9925억 원)의 추가 예산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이미 미 의회는 3월 초에 136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자 확전의 신호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독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게파르트 대공 전차 50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 올라프 솔츠(사민당)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패배 이후의 금기 사항을 깨고 연방군의 재무장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연방군은 독일의 전쟁 기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의 무기 지원 확대 목적을 이렇게 풀이했다.

“이런 무기 수송의 목적은 몇 주 안에 있을 전쟁의 다음 결정적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투쟁에서 그 나라를 무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대리전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 시대에 미국 역대 정부들이 피했던 전략이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어쩌면 핵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소련의 지배에 반대하는 동유럽 무장 봉기들을 지원하지 않았다. 예컨대, 1956년 소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최신형 곡사포

군 탱크가 헝가리 혁명을 짓밟자 헝가리 사람들은 서방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아야젠하워는 “우리는 무장 반란을 주장하거나 촉구한 적이 결코 없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미국이 소련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해 서가 아니었다. 미국과 유럽,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간담을 서늘게 할 위험을 계산한 결과였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로이드 오스틴이 “러시아 약화” 발언을 한 그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지원하면서 “본질적으로” 러시아

와의 대리전에 참전했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는 현 상황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핵 위협에 빗댔다. 1962년 가을 인류는 핵 절멸의 위기에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쟁은 아니다. 1999년 나토의 발칸반도 전쟁이 있었다. 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전쟁, 팔레스타인 투쟁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와 마을이 파괴됐다.

그러나 이 전쟁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두 핵 강국들이 본격적으로 관여한 전쟁이 아니었다.

프랑스 외무장관 장-이브 르드리앙은 이렇게 말했다. “대서양 동맹이 핵 동맹이기도 하다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는 말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를 더욱 양극화시키고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영국 외무장관 리즈 트러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며 모두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 “우크라이나 너머에서 떠오르는 위협”에 맞서 새로운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주요 세계 열강이 충돌할 공산도 커질 것이다.

우리는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에서 무방비 상태의 무고한 시민들을 피 흘리게 했다는 사실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나토의 전쟁에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반대한다.(4면의 관련 기사를 읽어 보시오.)

제국주의 간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독일 혁명가 카를 리프크네히트(1871~1919)의 국제주의적 기치를 되살려 반전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관한 푸틴과 바이든의 거짓말



푸틴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라고 강변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 때까지 “인민들의 감옥”(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제정 러시아를 묘사한 말이다)에 갇힌 수많은 소수민족들 중 일부였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200년 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차르 알렉산드르 1세는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1871년에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키예프-모헐라 아카데미(1615년 개교)를 폐쇄했다.

반면, 볼셰비키는 혁명 직후에 우크라이나어 금지를 해제했고, 우크라이나어로 된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의 희생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둘 모두의 희생자다.

1991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 당시 러시아의 국명)에서 분리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이후 동서 진영 사이에 끼인 죽음의 경계 지역이 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를 후견국으로 삼고 싶어 하는 정부와 미국을 후견국으로 삼고 싶어 하는 정부가 번갈아 등장했다. 그러다가 2014년 유로마이단 이후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은 친서방 노선을 확정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가 됐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첩보 지원은 공격 좌표 찍는 전쟁 행위

김준호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5월 4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첩보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침몰시켰고, 러시아군 장성 12명을 사살했다.

5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

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소형 상륙정을 타격한 데에도 미국의 첩보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러시아군 부대·장비·지휘부의 위치 파악을 도운 덕분이었다.

“[모스크바함 격침 당시] 미국의 첩보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물량이 부족한 넵튠 미사일을 두 발이나 사용하기를 꺼렸을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전비·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맞춤형 드론까지 개발해 줬다. 드론 구입 비용도 미국 정부가 댔다.

무기를 돌려 주고 그 무기를 사용할 곳도 알려 주는 것은 엄연한 전쟁 행위다. 그리고 그 전쟁 행위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전쟁 종식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을 빌려 러시아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다.(관련 기사 3면을 보시오.)



한국, 나토 첩보 동맹에 가입하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5월 5일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나토의 첩보 동맹 사이버방위센터(CDCCOE)에 가입했다. 이날 신규 가입한 국가들(한국·캐나다·룩셈부르크) 중 나토비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는 대(對)러시아 첩보전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기구로, 매년 각국 정보기관이 모여 합동 훈련을 벌이는 나토군 지원 기구이다.

한국의 이번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한국이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을 신청한 것은 2019년이였다. 하지만 가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이버방위센터 파트너십 지위를 획득한 2022년 3월 이후이다.

이제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대(對)러시아 첩보전 훈련을 정기적으로 벌이게 된다. 이 훈련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 훈련이 될 것임은 명백하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함께 훈련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가입은 러시아 동쪽에서 서방의 첩보전을 강화하는 포석이 될 것

이다. 또, 아시아에 서방의 군사 동맹이 힘을 투사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연안지역에서 나토 동맹의 힘이 투사될지 모른다는 의심은 이미 있었다.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전선의 중요한 일부인 한국·일본·호주는 모두 나토의 파트너십 국가이고 6월 말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았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나토 동맹의 주요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에 자국의 군함을 보내 합동훈련을 벌인 바 있다. 2021년에는 영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지나 일본까지 오기도 했다.

이는 중국을 매우 자극하는 일이다. 한국의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체스판에 한국을 끌어들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에 간섭할 발판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나토 동맹을 지원하면 아시아 정세가 긴장될 것임을 알고도 전쟁 지원에 동참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조로 나토에 보낸 돈만

1억 달러(1273억 원) 가까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은 윤석열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군사적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해 미국의 경쟁국(중국·러시아) 압박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친서방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참가합시다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일시: 5월 21일(목)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집회 후 행진)

주최: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제안 중 <https://bit.ly/0521-StopTheWar>

문의: 010-7550-2131 (English 010-2196-1917)

서방 측의 압박이 키운 푸틴의 전쟁 의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5월 9일 전승기념일(제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일) 행사 연설에서 “서방이 차원이 다른 위협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 행위가 그 위협에 맞선 “유일하게 정당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이날 열병식에서 서방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과시했다. 예고됐던 핵전쟁 지휘통제 항공기 ‘IL-80 뚝스데이’ 에어쇼는 없었다. 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RS-24 ‘야르스’와 단거리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가 등장했다.

행사를 며칠 앞둔 5월 1일 러시아 국영TV가 유럽 주요국 수도들에 핵 공격을 가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 야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푸틴은 “지금 러시아군은 자신의 땅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가 러시아 영토라는 주장이다.

이런 언사와 무력 시위에는 푸틴의 야심뿐 아니라, 지금까지 러시아가 전쟁의 초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전쟁 개전 전만 해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쏟아지는 군사적 지원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서방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받는 압박이 더 커졌다.

그래서 푸틴은 군사력을 과시하며 서방에 맞서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삼 표명한 것이다.

러시아군은 전승기념일 행사 직전에 고정밀 미사일을 여러 발 쏘아,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오데사를 포격했다. 이 공격에는 오데사를 파괴·점령해 흑해 연안을 모두 손에 넣고 우크라이나 중심부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포격으로 우크라이나인이 최소한 수십 명 사망했다.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와 옥수수 20퍼센트를 수출하고 있다. 두 나라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와 칼륨의 주요 생산국이다.

그런데 전쟁과 제재의 영향 등으로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자 비료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고공행진을 하던 식량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식량 가격 상승의 여파로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産) 밀을 주로 수입 하던 중동과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여파는 일부 나라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전부터 심화하던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의 여파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위기에 취약한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남반구 국가들이 그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밀 수출은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무려 275퍼센트나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이 급감하자 인도가 그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다. 인도는 기존에도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다.

그런데 지난 3월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도의 밀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122년만에 가장 더운 3월을 보내야 했다. 전국 평균 기온은 33.1도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46.5도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온도에 민감한 밀 생산량이 올해 절반 가까이 줄어 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했다.

기후 위기는 이런 상황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벌어지게 한다. 과거에는 반세기에 한 번 있을 법한 이런 폭염이 이제는 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또 다른 주요 밀 생산국인 캐나다와 호주도 지난해에 각각 고온현상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가뭄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 3위 옥수수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4월 강수량이 예년 대비 70퍼센트나 줄어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식량계획의 에티오피아 내 식량 배급소. 에티오피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고통을 겪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양극화와 빈곤

‘2022년 국제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3개국에서 1억 9300만 명이 ‘재앙적’ 수준의 식량 위기로 ‘위급 상황’에 처해 있다. 가장 심각한 기근을 겪는 곳은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그리고 예멘이다.

2020년 보고서에 기록된 수치인 4000만 명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대개 제국주의 전쟁과 점령을 겪었거나(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자원을 수탈당한(콩고민주공화국 등) 나라들이다.

식량 위기는 가뜰이나 경제 침체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특히 코로나19가 세계경

제의 침체를 불러온 2020년과 2021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반면, 같은 기간에 부가 4조 4000억 달러나 늘어난 전 세계 억만장자들은 식량을 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기후 위기의 상호 작용

전쟁과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나토를 확장시켜 온 서방과 인접 국가들을 자신의 제국주의 영향력 밑에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각축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민중이다. 러시아의 평범한 이들도 서방의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서방이 폭격한 이라크와 소말리아

같은 곳은 사회 인프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열악해,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9년 이라크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경에는 5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폭염하에서도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기후 위기는 부국과 빈국을 가리지 않고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집단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보여 준 것처럼 미국에서도 가난한 흑인 노동계급 밀집 지역이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폭염은 신자유주의 공격에 시달려 온 인도의 농민들과 수단의 노동계급이 가장 먼저 겪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금의 위기는 저항도 낳고 있다. 수단, 이라크, 페루, 스리랑카 등에서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와 저항이 벌어졌다.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저항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뒤흔들었던 ‘아랍의 봄’ 혁명의 배경에도 물가 인상과 생활고가 있었다. 이런 저항만이 인류의 미래에 희망도 있음을 보여 준다.



영양실조 진단을 받은 3세 예멘 아동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정진희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결을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결정에 동의한 5명은 알리토를 포함해 모두 공화당이 임명한 자들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은 공화당과 낙태 반대 세력의 숙원이었다. 트럼프가 보수적 판사들을 임명해, 대법원에서 보수파가 압도 우위가 됐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 다.

그러므로 알리토 초안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될 듯하다. 대법원 판결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문 초안은 미국인 다수의 의사와 거리가 멀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의 올해 4월 여론조사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4퍼센트였다. 28퍼센트만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는 한줌의 우익 판사들이 이제 미국인 다수의 의사를 외면하려 한다.

50년 역행

완벽하지는 않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는 전국적 기준이 돼 왔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면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려 낙태권은 완전히 개별 주(州)에 맡겨져 주별로 낙태권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수많은 여성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26개 주는 곧 낙태를 크게 제한할 것이다. 판례 파기 즉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곳이 22개 주이고, 4개 주에서 이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텍사스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거의 다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고, 미시시피·플로리다·켄터키주 등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한 법안이 올해 4월 통과됐다.

낙태 금지의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지난해 미국의 한 연구는 낙태가 금지되면 임신 관련 사망이 2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모성 사망률은 이미 부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

낙태권을 부정하는 주들은 병원 지원비를 줄여 산전 건강 관리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 <타임>지는 “1995~2017년 낙태를 가장 심하게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는 주들에서 모성 사망률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늘 그랬듯이, 낙태가 금지되면 노동계급 여성(특히 가난한 흑인이나 히스패닉 여성)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낙태 시술을 받는 것도 힘들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 이것은 다른 주요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피임,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 권리, 이주민 권리 등에 관한 판례도 위협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보수적 결정이 나올 것에 고무된 우파 세력들은 여러 사회운동이 거둔 성과를 무로 돌리고자 잔뜩 버리고 있다.



2022년 5월 7일 시카고에서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믿을 수 없는 민주당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보도되자 바이든은 즉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낙태권을 입법화하겠다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세력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 4년 후인 민주당 대통령 지미 카터 재임기에 낙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대부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 수정안은 지난해까지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모든 대통령과 의회가 승인해 왔다.

대통령이 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은 모두 대선 때는 낙태 선택권을 성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선 뒤에는 그런 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바마 취임 첫 2년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는데도 그랬다.

보수·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는 데에 민주당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

주당은 끊임없이 낙태 반대 세력을 달래려 해 왔다. 민주당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남부의 보수파 기반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화당이 여러 주에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은 그런 공격을 막는 데 무능함을 자주 드러냈다. 특히, 남부에서 민주당은 파란만장한 기록을 갖고 있다.

2019년 켄터키주 민주당 의원 존 심스는 지난해 텍사스주법과 비슷한 ‘심장박동’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9년 루이지애나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 주지사 존 벨 에드워즈가 이 법안을 승인했다.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은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최후 보루를 자처하지만, 낙태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려 들 뿐, 낙태권을 지키는 데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 바이든은 집권 이후 지난 2일 대법원의 판결문이 유출되기 전까지 “낙태”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 7면으로 이어짐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 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의 발표 원고이다.



토론회 영상 보기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컸

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역대 최소 득표차로 간신히 대통령이 됐다.

오늘은 윤석열 앞에 놓인 국내외 환경을 살펴보면서 이 정부의 앞날과 윤동의 과제를 얘기해 보려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본질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직면해 자본가 계급의 다수가 노동계급에 고통을 전가 하려고 선택한 노골적인 자본가 정부다.

인적 기반의 핵심은 기업주들이고, 이번 각료 인선에서 올드보이들이 대거 귀환했다. 평균 연령도 높고 틀에 박힌 신자유주의 친미 관료 출신자들이 다수다. 관료 퇴임 후 대기업 사외이사나 로펌 자문 등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대가를 받다가 관료직으로 돌아온 자들이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가 특권층 변호로 유명한 김앤장에서 자문료를 20억 원이나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다른 장관 후보들은 론스타 의혹, 자녀 입시 ‘공정’ 문제, 병역면제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비리 악취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윤석열의 구호,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일부의 기대는 빠르게 잠식될 것이다. 윤석열을 지지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조국과 다를 바가 뭐냐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본가 계급 다수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일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들 앞에 놓인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여전히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지만, 실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다.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탈원전 폐기와 재정 지출 축소가 “공정과 상식의 회복” 항목에 포함돼 있다. 악취 나는 인간들이 국가 고위직에 올라서 보통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축소시키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를 정책 기조로 표방하고 있다. IMF도 버린 전형적인 낙수효과 이론에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를 우악스럽게 결합시키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라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하나로 반도체를 강조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 핵심에 반도체가 있다. 요새는 총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로 전쟁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윤석열 인수위가 말하는 것도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다. 그들이 보기에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산업안전이나 임금 인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쪽의 규제 완화가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자본가 계급 다수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일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들 앞에 놓인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자유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단어를 34번이나 썼다

대외 환경

먼저 대외 환경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국제적 영향이 크다. 공급망 불안정과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가져 온 공급 위기, 여기에 기후 위기 등이 겹쳐 식량과 에너지 등 생활필수품들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응해 한국도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기보다 고물가, 고금리, 저소득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대중의 불만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 그럴수록 지배자들은 성장을 높이기 위해 더 빨리 노동계급을 공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은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밀하게 결합돼 있

다. 미·중 갈등의 심화는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깊숙이 통합돼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준다. 한국은 미·중 갈등 여파로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 모두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했다. 중국 견제용인 사드를 배치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고,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다 일본에게도 경제 보복을 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확고한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딜레마가 만만치 않다. 우선,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이 수출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대선 기간에 주한 중국대사와 논쟁도 불사했던 윤석열이 당선 후 시진핑과 직접 통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다. 한미동맹 강화에는 또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문제도 뒤따른다.

▶ 9면으로 이어짐

▶ 8면에서 이어짐

이런 문제들은 지배계급 내에 이해득실의 날카로운 대립과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폭발력 있는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대외 환경 탓에 우파 측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높이되 국방과 기술력 등에서 “자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강의 명분으로 북한 주적론이 강화될 수 있다. 윤석열은 북한 문제에서 전통적인 우파 기조로 돌아갈 것이고, 이것은 국제적인 지정학 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의 대북 전술 신축성 문제도 있으므로 일시적인 해빙 국면이 있을 수 있다.



글로벌 리더 국가 윤석열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강조한 것은 한미 동맹의 강화(글로벌화)를 가리킨다

윤석열 정부의 전망

윤석열 정부는 당장은 지방선거에 올인할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로 국회 의석 열세를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수도권과 충청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이겨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결과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매우 신중하게 나올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간 전국 선거가 없으므로 그 기간이 각종 개혁을 추진할 기회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불리한 대내외 환경과 강력하지 못한 처지 때문에 추진 방식은 신중하고 교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들여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시키는 노동개혁 / 더 늦게 덜 받게 하는 연금 개혁 / 전력과 의료 등의 민영화 / 공공부문 효율화 /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 반환경 정책 / 한미군사동맹과 군비 확대 및 수출 /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기반 외교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보훈문화 조성 등 군사주의와 이데올로기적 통제 강화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 등등.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박근혜와 문재인이 의료 등의 민영화 추진을 위해 만들려던 법이다.

국정 과제 문서에는 “효율화”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온다. 그중 정부 재정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공기관 효율화 등이 눈에 띈다. 특히 공공기관 효율화는 인력 효율화와 자회사 정리를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회피하려고 자회사를 만든 것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는 인력 감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혁의 관철이 쉬울 것인가와 별개로 개혁의 방향과 폭은 지금까지 봤듯이 매우 전방위적이다.

이런 개혁들을 추진하는 방식은 당

▶ 10면으로 이어짐

윤석열 정부 등장의 맥락

대중의 개혁 염원이 존재한다는 것도 윤석열에게 큰 난관이다.

이번 정권 교체는 사회 전반이 보수화하거나 계급간 세력균형이 후퇴한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대내외적 위기가 심각해지는데도 대중의 변화 염원은 충족되지 못해, 기성 정치 세력이 매우 불신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변화 염원 대중은 문재인인의 배신에 환멸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우파의 귀환을 바란 것도 아니다. 윤석열은 반사이익을 크게 얻었음에도 역대 최소 득표차로 당선됐다. 취임 전인데도 국정 기대치가 역대 최저이다.

개혁 염원 대중은 대선 결과에 낙담해 주눅들기보다는 일종의 전의를 다지고 있다. 가령 개혁 염원 여성 청년

수만 명이 대선 직후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이 “개딸”(개혁을 지지하는 딸) 현상은 대중 운동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급 운동을 보면, 최근 5~6년새 성장한 의식과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노동절 집회에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모여 행진했고, 최근 정권 교체와 거리두기 완화가 겹치며 집회들이 늘고 있다.

이는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정권이 바뀔 때와 다른 점이다. 당시는 환멸이 수백만 명의 투표 기권으로 표현됐다. 당시 민주당은 지리멸렬 사분오열 상태였고, 좌파 정당 민주노동당은 분당하고, 민주노동당 내분과 지도부 비리 등으로 존재감이 추락한 상태였다. 덕

분에 이명박은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다. 총선 압승 한 달 만에 청소년이 점화시킨 촛불 운동의 일격을 맞았지만 말이다.

대선 이후 재계와 우파 언론은 대선 공약 중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른바 복지포퓰리즘 공약은 빨리 철회하라고 윤석열을 압박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요구에 전폭 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의 처지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지는 탄탄하지 못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동에서 보듯 국회에선 크게 열세다. 물론 윤석열은 돌아온 우파 정부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 주려고 애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개혁 정책



노동 개혁
임금인상 억제
노동시간
규제 완화



연금 개혁
더 늦게
덜 받게



공공부문
전력·의료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반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안보
군비 확대
한미군사동맹 강화
군사주의 이데올로기
강화

▶ 9면에서 이어짐

장은 신중할 듯하다. 윤석열은 노동부장관에 반독재 학생운동 출신이자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을 임명했다. 이정식은 한국노총 내 합리적 대화 노선의 대표 인물이다. 윤석열도 나름의 사회적 대화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신호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법 개악,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도 모두 온건파 노조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여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 지도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대화가 그들이 기대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선 저항이 노동계급 전반으로 보편화되지 못하도록 차별과 편견을 활용한 노동계급 이간질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공통된 계급 이해관계보다는 각자의 특수한 피해자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치, 연대보다 배제와 차이, 특수성을 앞세우며 운동을 파편화시키는 정체성 정치로는 윤석열 정부의 개악에 제대로 맞서기 힘들 것이다.

운동의 과제

마지막으로 저항의 전략 문제를 살펴 보자.

첫째, 민주당과의 제휴 노선, 즉 민주주의 정치가 여전히 문제일 것이다.

민주당은 우파 정부하에서 야당으로서 반사이익을 얻는 처지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제휴 전략은 민주당 집권기뿐 아니라 우파 정부하에서도 해악이 컸다. 민주당의 선거 득표에 방해가 될까 봐 대중 투쟁을 자제·억제하고, 우파의 위협을 과장해 변화 염원층을 민주당 지지에 묶어 놓는 것이다.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은 좌파 정당들의 영향력을 오히려 훼손시켰다.

최근 '검수완박' 법을 둘러싸고 정의당과 진보당이 보인 태도는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5년간 개혁 실패의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며 검찰 개혁이라는 사이비 개혁 기치를 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 염원층을 민주당으로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 편을 들어 왔다. 특히, 정의당은 대선 때 그간



윤석열 취임식 윤석열 정부의 입지는 탄탄하지 못하지만, 돌아온 우파 정부의 면모를 확실히 보이려고 애쓸 것이다

대선 기간

심상정 “조국 사태 침묵 반성한다”



선거 득실을 따지며 민주당과 동맹하는 것은 효과적 반(反)우파 대안이 아니다

'검수완박'에 전원 찬성표 던진 정의당... 후폭풍 조짐도

입력 2022.05.01 21:30

67 8

차별금지법 공청회 이끌어냈지만... 정의당 지지층 진보진영 등 우려도

논평

검찰공화국 저지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22. 04. 28

진보당

적 운동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경제주의와 부문주의로는 운동을 정치화하고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령 노동조합의 부문주의와 경제주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정당한 불만이나 불편한 용기 운동 등의 쟁점들을 회피했다. 그럼으로써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아무 구실도 못하고 스스로 주변화됐다. 노동조합 부문주의와 경제주의로는 노동조합 투쟁들조차 서로 연결하고 보편화하지 못한다.

물가 급등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차별, 공정성 사기에 대한 불만이 청년들에게서 터져 나

올 수 있다. 노동조합주의나 민주당과의 제휴를 위해 급진화 잠재력을 억제하는 전략은 또다시 거둬들인 좌절을 부를 것이다.

우파 정부에 제대로 맞서려면, 노동계급 전체의 투쟁, 그리고 노동계급 연대의 정치가 중요하다. 노동운동을 미조직 청년들까지 포함한 노동계급 대중의 운동으로 이해해야지, 계급의 5~10퍼센트밖에 안 되는 노동조합의 운동으로 좁게 생각해서 안 된다. 혁명적 좌파는 운동을 범계급적이고 개방적으로 건설하려 해야 하고, 배제가 아니라 연대를 확대해 저항을 정치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와 더불어 론스타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다.

정호영을 시작으로 김인철(사퇴), 추경호, 이종호, 박진, 이상민, 박보균 등은 ‘부모 찬스’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의와 상식”을 말하는 한동훈도 노동자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특권과 특혜를 공기처럼 누리며 사는 별세계 사람임 드러났다.

한동훈의 딸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버지와 김앤장 변호사 어머니를 둔 덕에 평범한 노동계급 가정의 자녀들은 꿈도 못 꿀 경험과 스펙을 쌓고 있다.

한동훈은 본인도 ‘부모 찬스’의 수혜자였다. 불과 25살에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엄마 찬스’로 편법을 써 증여받았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1타강사’를 자처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부동산 개발 민간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원희룡은 제주에 영리병원을 허가해 주기도 했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였던 김인철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부모 찬스’, 한국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셀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신자유주의, 친미, 특권층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김앤장 고액 자문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편법 증여, 자녀 ‘아빠 찬스’ 의혹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론스타-외환은행 불법매각 관여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입학/병역 특혜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 부동산 민간 특혜 의혹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허가’,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 등 너무 이력이 추접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버티기로 자신의 부패 의혹을 감추려 한다. 한덕수, 정호영, 김현숙, 박보균 등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다. 조승환은 자녀 관련 검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사생활 정보에 민감한] ‘MZ세대’라 자료 제출 동의 받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냈다.

윤석열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혔다. 이시원은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반대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를 기소하는 등 전형적인 공안검사(대법원이 무죄 판결할 정도로 무리한 기소).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약하며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을 개발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을 변호했다. 실로 악랄한 자다.

“공정과 상식”은 무슨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 준 ‘내로남불’과 권력형 부패를 비난하며 “공정”과 “상식” 운운해 왔다. 똥물은 개가 겨 똥은 개를 나무란 꼴이다.

원조 부패 세력인 우파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것은 금세 들통날 사기였다. 반부패 민주주의 운동으로 우파 정권이 쫓겨난 게 불과 5년 전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선 과정들도 부패 박람회였다. 박근혜 정부는 내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해 취임하고도 한 달 동안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관료들은 부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 편에 서서 노동계급과 좌파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 온 인물들이기도 하다.

용어설명

론스타 게이트

2003년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헐값 매각한 의혹이 있는 사건. ‘부실 은행 정리’라는 미명하에 정·관·재계가 유착해 외환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조작하는 등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 백남기 농민 사인을 은폐하는 데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현숙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당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고 보수청년단체 기자회견까지 조직했다. 외교부장관 후보자 박진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촛불 운동이 벌어진 2008년에 “한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공명정대한 검사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끼리끼리 유착해 권세를 누리면서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온 우파 엘리트들을 발탁했다.

윤석열은 취임 만찬에 5대 그룹 총수와 재계를 대표하는 여섯 단체의 대표를 신라호텔로 초청해 회동한다. 친기업·신자유주의 기조를 취임식 날부터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에 내각에 앉힌 인물들을 그에 걸맞은 자들이다. 반동적이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대중적 투쟁들이 활발해져야 한다.

이재혁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화물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운임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일몰제 폐지), 전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의 컨테이너/BCT(시멘트) 부문 노동자 2500명은 5월 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더이상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없다”며 파업 준비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그동안 요

소수 파동과 기름값 폭등에 화물 노동자들이 고통의 벼랑 끝에 내몰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물가에 운임 인상은 고사하고, 안전운임제마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たちは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컨테이너, BCT 파업만으로도 수출입과 건설 현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동지들이 투쟁의 선봉이 돼 주십시오!”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화답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BCT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줬다 뺏기” 공격에 처한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다.

집회에서 지회장, 현장 조합원들은 말했다.

“[장시간 새벽까지] 하루 운영을 마치고

고 시동을 끄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행히 오늘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존권입니다. 우리 동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집회 이후 화물 노동자들은 여의도 국회 일대를 행진했다. 화물연대는 5월 말~6월경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박설

독성 생리대 문제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식열의 무대책

정부가 4년간(2018~2021년) 진행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1년째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결과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조사 방법이 편향적이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말이다.

그러나 독성 생리대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던 식약처가 '편향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2017년 독성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처는 엉터리 자체 전수조사에 기초해 생리대가 안전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내 몸이 증거”라며 분노를 터뜨렸고,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은 역학 조사를 실시하라고 청원 운동을 벌였다. 독성 생리대 반대 여론이 매우 컸기에 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될 수 있었다.

무책임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맡았던 책임 연구자는 일회용 생리대가 “외음부 가려움과 통증 등 생리 관련 증상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가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다가 결국 자체 검증단을 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겨레> 5월 3일자). 책임 연구자는 이를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돌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내버려 둔 채, 퇴임했다. “여성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이라고 떠들더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생리대 유해성 입증과 안전 대책을 기대했던 여성들을 또다시 배신한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집권 내내 독성 생리대 문제를 외면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생리대 제조 기업의 자율규제와 실효성 없는 ‘전성분 표시제’ 등을 추진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규제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기업의 이윤 보호를 우선한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유해성 논란이 있는 생리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고가의 ‘유기농’ 제품 구매로 내몰렸다.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은 무책임한 문



여성에게 필수품인 생리대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

안전과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쟁 논리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화학물질을 생리대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재인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가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골적으로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도 독성 생리대 문제 해결에 열의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독성 생리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생리대 유해성을 폭로한 여성단체와 특정 생리대 제조업체와의 유착 문제에만 골몰했다.

윤석열은 지금껏 생리대 문제를 언급한 바 없다. 윤석열의 친기업·규제 완화 노선을 보건대, 만만치 않은 투쟁이 있지 않는 한, 생리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이다. 따라서 생리대 안전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공개돼야 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윤 제일주의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혈 흡수를 위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형광증 표백제를 다량 사용한다. 모두 유해한 화학물질로, 이런 것들은 접착제와 향료 등에도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제조 방식은 1970년대에 접착식 일회용 생리대가 개발된 이래 거의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계속 사용해 왔다.

안전한 생리대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 무화학 흡수제로 교체하고, 친환경·유기농 재료로 전부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안전한 생리대를 만드는 데 열의가 없다.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자, ‘친환경’, ‘유기농’ 고가 제품이 늘어났지만, 이조차 안전하지 않다.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만 유기농 재료를 쓰고, 나머지 화학물질은 그대로 사용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안전과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쟁 논리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화학물질을 생리대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생리대 안전 문제에 열의가 없는 것도, 바로 기업 이윤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의 이윤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부담되는 안전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 오늘날까지도 생리대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이유다. 생리대 허가 방식도 한국처럼 대체로 허술하고 빈약하다.

심지어 생리대 유해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전례조차 없다. 황당하게도 한국의 건강영향조사가 세계 최초의 생리대 역학 조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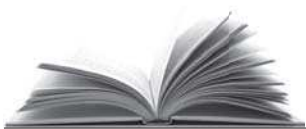
자본주의는 이윤 우선주의 때문에 여성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독성 생리대를 양산한다. 참으로 끔찍한 체제다.

전주현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 [긴 글]
진보교육감 시대
12년의 성과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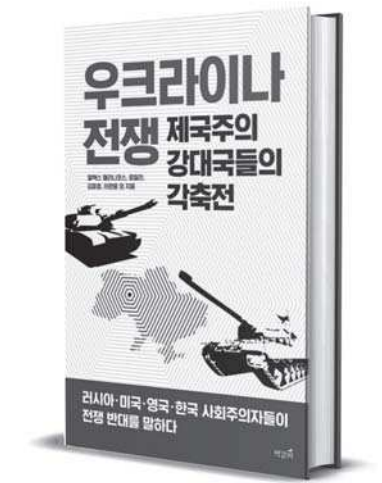
신간 소개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세계적 파장,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서방의 제재와 개입은 왜 대안이 아닌지, 전쟁을 끝낼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현재 전쟁에서 서로 적대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영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내는 전쟁 반대 목소리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끔찍한 파괴를 낳고 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

그러나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일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기 동맹국들을 데리고 벌이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기도 하다. 이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할 개연성을 상당히 높였다. 전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지음
책갈피, 352쪽, 17,000원

을 저지하려면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의 노동계급 운동도 자국 지배자들의 전쟁 노력에 맞서야 한다.

이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로 협소하게 보는 널리 퍼진 견해와는 달리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 이 전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

의자들이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발전시킨 제국주의론에 기초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로 적대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러시아,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그리고 한국의 혁명적 좌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긴급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이런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다. 특히 푸틴의 엄중한 탄압에도 반전 운동에 참여해 온 러시아 혁명적 좌파의 주장은 깊은 울림을 준다.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발전에 공헌이 큰 세계적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이 책의 빛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저명한 좌파 인사들인 폴 메이슨, 질베르 아슈카르와의 논쟁에서 캘리니코스는 러시아에 맞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서방을 지지해야 한다

거나 이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는 주장을 예리하면서도 차분하게 반박한다. 이 논쟁은 유사한 주장이 널리 퍼져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 책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최근 수십년의 정치 경제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는 장점도 있다. 강대국 간 경쟁의 무대가 돼 온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소련 붕괴 이후의 상황을 알면 이번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점은 우크라이나가 낯선 한국의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자 연대〉를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본지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이미 봤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책에는 본지에 실리지 않은 논문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이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을 끝내고 더 큰 전쟁의 위험을 물리칠 운동을 건설하는 데 좋은 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원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공저자

신간 소개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옛 석암베테스다 요양원)의 거주인과 임직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향유의집은 모든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가족이 더이상 돌볼 여력이 없어진다면 대개는 '시설'로 보내져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된다. 여기서 시설이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해서 수용하는 집단적 생활공간을 말한다.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시설을 점점 더 거대한 감옥처럼 만들었다. 시설에서 부정, 비리와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다.

투쟁의 기록

이 책은 향유의집 거주인들과 직원들의 투쟁을 담은 기록물이다. 투쟁은 이

들이 재단 비리를 폭로하며 시작했다. 재단 설립자 이부일 씨와 그 일가는 온갖 비리를 저질렀는데 “2001년부터 7년간 밝혀진 횡령액만 14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08년 거주인들은 비대위를, 직원들은 노조를 조직해 재단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재단 측을 비호하는 양천구청과 서울시에도 맞서 싸웠다.

이 책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진짜 대단했어요. 나와 같은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집회 중에 휠체어로 전경 방패를 막 박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활동가가 나보고 얌전하게 있지 말고 화를 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입다 박았어요. 그렇게 하니깐 쾌감이 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정부에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항의할 수 있구나.'”(뇌병변장애가 있는 거주인 황인현 씨)

설립자 이부일 씨가 구속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지만 투쟁은 거기서 끝나

지 않았다.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시설에서의 하루는 먹고, 목욕하고, 싸고 끝이에요.” 하고 황인현 씨는 말한다. 시설 안에서 근근이 ‘숨만 쉬는’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슴 한켠에 품고 있었다.

그렇게 2009년 6월, 향유의집에서 살았던 거주인 8명이 시설을 나와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대선 가도를 달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농성 두 달 만에 한국 최초의 탈시설 정책을 발표했다. 8명 모두 탈시설에 성공했다. 이것이 한국 탈시설 운동의 시발점이 된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이다.

옛 비리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뒤에는 탈시설 활동가들이 이사장을 맡아 모든 거주인들을 순차적으로 자립시켰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탈시설이 마치 장애인을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것인 양 왜곡하



홍은전 외 지음, 오월의봄, 352쪽, 16,200원

는 비난에 부딪혀야 했다고 한다.

탈시설은 그런 게 아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고 일대일 활동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 책은 중증장애인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돌봤던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향유의집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권영자 씨가 처음에는 탈시설을 걱정했지만 이후 자립한 거주인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160~162쪽).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향유의집 사례를 통해 ‘시설 밖에서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시현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0



서평 |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손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저자는 트랜스젠더 차별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저널리스트답게 여러 취재와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풍부하고 분석적으로 썼다. 영국의 사례가 많지만 한국의 트랜스젠더 차별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저자는 자신이 백인 중산층 트랜스 여성이라는 점을 의식하며 글을 썼다. 그래서 인종차별로 더 취약한 처지로 내몰리는 유색인·난민 트랜스젠더, 오늘날 공격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트랜스젠더, ‘성 노동’으로 내몰리는 트랜스젠더(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은 ‘성 노동’에서 불비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의 경험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억압의 정도를 비교하며 도덕주의로 나아가는 ‘특권 이론’에 타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억압과 차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책의 주된 관심사는 현재와 같은 사회가 트랜스인들의 삶을 불가피하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오직 트랜스인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힘과 가진 것을 빼앗기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자 한다.(강조는 서평자)”

예컨대 2장 ‘옳은 몸, 그른 몸’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의료 서비스가 트랜스젠더에게 얼마나 권위적이고, 턱없이 부족한지 생생하게 다룬다. (물론, 영국의 NHS는 의료적 성전환에 국가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진일보한 제도다.) 나아가 NHS의 민간 시장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이윤 동기가 강화되는 것이 트랜스젠더



지난해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트랜스젠더 김기홍·변희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
손 페이 지음, 돌베개, 398쪽, 23,000원

와 시스젠더* 환자 모두에 이롭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 트랜스젠더 의료 쟁점을 단지 당사자만이 아니라 낙태권을 포함한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광범한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며 정치적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단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국가적 폭력(경찰력, 감옥, 이주민 강제 수용소)을 다룬 5장 ‘국가’도 급진적이고 탁월하다. 저자는 감옥과 이주민 강제 수용소 제도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진정한 트랜스 이슈

저자는 의도적으로 책 제목을 ‘트랜스젠더 이슈’라고 지었다. 흔히 미디어에서 다루는 트랜스젠더 이슈란, ‘트랜스 여성이 여성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냐’를 둘러싼 논쟁 따위로 협소하게 국한되곤 한다. 반면, 저자는 오늘날 트랜스젠더들이 나날이 마주하는 사회적·물질적 문제들, 진정한 ‘트랜스젠더 이슈’를 보여 주고자 한다.

저자는 반자본주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대안들에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우리의 목표는 “트랜스젠더 해방”이어야 한다. “트랜스젠더 권리” 혹은 ‘트랜스젠더 평등권’ 같은 비교적 소박한 목표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적

이자 가부장적이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모멸하는 이 세상에서 평등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류 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들의 ‘가시성’을 지향하자는 전략, 기업들의 다양성 프로젝트, 트랜스 혐오를 해결한다며 경찰력 강화에 협력하는 것, 의회 로비 전략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정치가 대다수 평범한 트랜스젠더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핑크워싱의 동기가 문제적이더라도] LGBTQ+ 단체가 일부 트랜스 직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그 동기를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순이익이 아닐까? 문제는 일부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날그날의 향상이 이로울 수는 있어도 단편적이고 고립되어 있으며 개별 고용주의 방향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수준에서 보는 더 큰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트랜스인에게는 문제가 지속된다.”

LGBT 운동 안에서 LGB와 T 사이의 긴장, 분리주의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각각 한 챕터를 할애해 다룬다. 이 논쟁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저자가 트랜스젠더 다수가 노동계급이고 트랜스젠더 내에도 계급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계급 문제를 분리하는 접근법을 비판한다. 3장 ‘계급 투쟁’은 이런 접근법을 가진 주류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다.

다만, 저자는 트랜스젠더 해방 전략에서 노동계급의 구실과 잠재력을 충분히 다루고 있진 않다. 계급은 여러 차별받는 집단이 가장 광범하고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는 원천이자, 차별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이런 분석이 더해진다면, 저자가 이 책을 쓰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공통된 희망”에 엔진을 달 수 있을 것이다.

성지현

용어설명

시스젠더

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트랜스젠더의 상대어다.



유우성 간첩 조작 기사를 중용한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시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처음부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유 씨가 탈북자 지원 업무를 이용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여동생 유가려 씨는 탈북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걸로 악명 높은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6개월이나 갇혀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해야 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을 맡은 검사 이시원과 이문성(이 사건 직전 국정원 파견 검사를 지냄)은 유우성 씨가 2006년 어머니 장례식 참석차 북한에 다녀올 당시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그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우성 씨는 부인했다. 검사 측 주장은 증거로 입증되지 못해 결국 간첩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검사 측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경찰)이 발행한 2006년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등을 결정적 증거라고 내놓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사실 조회 요청을 받은 중국 측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서류 3개가 모두 위조라고 재판부에 탄신했다.

하다 하다 다른 나라 정부의 공문까지 날조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도 국회에서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 것이 분명하다”고 우겼다.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는 결국 무죄 판결이 났고, 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요원들과 조선족 협조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의 형량도 미미했고, 담당 검사 이시원과 이문성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 둘의 해명을 다 수용해 정직 1개월 처분만 했다.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지시 의혹

그러나 정황을 볼 때, 이시원 등이 위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판 때부터 제기돼 왔다.

2012년 수사가 시작될 때는 보안경찰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을 위한 공안 분위기를 조성시킬 필요가 컸던 시기다. 또한 대대적인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국정원 주도로 자행됐다. 유우성 씨를 구속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시기는 박근혜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이었다.

이시원은 처음부터 간첩 혐의로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서 1심에서 무죄가 난 간첩 혐의를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할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조작 의혹을 끈질기게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공문 위조·날조 사실을 국정원과 검사들이 재판 당시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2014년에 제기했다.

2016년 <시사인>의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박원순 공작” 보도를 보면, 전직 국정원 요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이 “박원순이 채용한 간첩이라는 콘셉트를 만들기 위해 둔 무리수였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유우성 씨는 2011년 오세훈 사퇴 전에 채용됐다.

마침 증거 위조·날조가 벌어진 때는 공안 검사 대선배인 김기춘과 황교안이 각각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 RO 사건 등 공안 수사를 지휘하던 때였다.

간첩 혐의 무죄는 정권의 공안 드라이브

김문성

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간첩 재판 무죄 이후 유우성 씨를 다시 기소했다. 2010년에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대북 송금을 북한 당국에 보내는 돈이라며 다시 기소한 것이다.

이 보복 기소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는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TF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도 제대로 된 인적 처벌에 이르지 못했다.

온 가족이 고초를 치른 유우성 씨 가족은 그나마 다행히 2020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총(겨우!) 2억 3000만 원 지급판결을 받아 냈다.

유우성 씨 사건은 지배 계급의 지배력 회복을 도우려고 박근혜 정부(검찰과 국정원)가 벌인 날조극이었다. 또, 그들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도 보여 줬다.

검찰의 수사 지휘가 경찰(이나 국정원, 이전 경찰이 국정원 수사권을 넘겨 받음)보다 더 정의롭다는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난다. 그 역도 거짓임이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검증됐으니 결국 둘은 한통속이다.

이시원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한 윤석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체제 수호에 매진하고자 인권 유린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공직자는 보답을 받을 거라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이런 자리에 무사히 임명되면 공직자들의 상명하복이라는 면에서 기강은 잡힐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면에서 기강은 마구 짓밟힐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5월 19일(목) 오후 8시 발제 김승주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519-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날 예정됐던 '전쟁, 평화, 평화주의' 토론회는 발제자의 건강 문제로 취소됐습니다.